전문건설 3만 업체 시대…‘ 공멸 ’ 위기감 확산

- 구조조정 차원의 유사 업종 통폐합 논의 한창, 27 개에서 12 개 정도로 -

9월 말 현재 전문건설업체 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개를 돌파하였다. 면허도 6만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설비공사업체는 4,500 개를 상회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연간 증가율이 5 6% 가량이었으나 올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전문업체들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7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의무 가입 규정이 폐지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조치 이후 전문업체 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3만 업체 돌파…

건설업은 특성상 경기가 불황기일수록 업체가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최근의 경기 불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기업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신규 창업에 나선 것도 업체가 늘어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국민의 정부 들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갖가지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기술력이 없어도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쉬워진 것도 업체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9월 들어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신청한 업체는 14 개사에 불과하다.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지난 7월 관련 조합의 출자 임의화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제를 실시한 지난달 25 일까지 신규 진출 업체 수가 급증, 3 개월 동안 매달 평균 543 개사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동안 월 평균 196 개사가 증가한 것에 비해 177% 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의무 가입 조항 폐지 이후 전문건설업체 수가 폭증하였다. 9월 말 현재 3만 업체를 돌파한 것이다. 면허도 6만개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과당 경쟁, 덤핑이 난무하면서 모두가 공멸하지 않느냐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설비건설업 등록 실태도 전문건설시장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설비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지난 7월 이후 매달 평균 62 개사가 증가해 지난 상반기 중의 월 평균 26 개사에 비해 149% 나 증가했다. 9월 말 현재 설비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4,592 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설비건설업체 역시 지난달 25 일 보증가능금액확인제 이후 신청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관련 조합에 신규 출자를 신청한 업체는 단 1건에 그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수의 계약 기준 금액을 기존의 3,000 만원에서 7,000 만원으로 확대한 것도 무실적 전문업체들의 증가세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질 개선이 유일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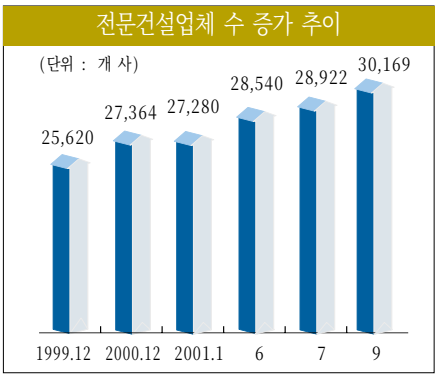
전문건설업체들은 시장 규모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정된 일감을 놓고 업체간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일이 불가피하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질 개선 외에는 달리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생존의 기로에 선 전문건설업체들은 앞으로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이 낮은 공사 수주를 억제하는 데 주력해만 한다. 전문업체들은 이제는 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주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인 정보화와 전문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들 대부분은 전근대적인 관행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확고한 제도나 절차보다는 그 동안의 관행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데 비해 생산성은 낮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록 IMF 이후 많은 전문업체들이 몸집을 줄이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관리 부문의 비효율성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과도한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보화를 통해 관리의 소프트화는 물론 e-비즈니스가 활성화된 지 오래이지만 대부분의 전문업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채 과거의 타성에 안주해 있는 실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 역시 이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공멸' 위기감 팽배

전문건설업의 위기 상황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초래된 부분도 있지만 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업체가 난립하면서 빚어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업계의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전문건설업계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적격심사제도가 업체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전문건설업계는 부실 기업이 제대로 퇴출되지 않은 채 과당 경쟁과 덤핑



수주가 난무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모두 '공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전문건설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하루 속히 단행돼야 하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시급

정부는 우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무자격 부실 업체를 가려내어 이들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금융 지원과 선급금 지원을 강화하고 보증 기관의 보증 책임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대형 건설업체가 부도날 때마다 정부가 하도급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치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도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하도급업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의 강화도 절실하다. 이와 함께 크게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 확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 개선,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예비비 책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 등이 시급하다. 적격 심사시 실적 평가 기준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SOC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 차원에서 민자 법인의 출자 주식에 대해 설정한 질권을 해지, 유동성을 높이고 민자 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업종 통폐합 논의 한창

현재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업종을 통폐합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기존 27개에 달하는 업종 가운데 유사한 성격의 공종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초기에 완강하게 반대하던 분위기도 이 상태로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상당히 누그러져 업종 통폐합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업종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업체 수가 크게 줄어 수주 경쟁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체들로서는 기사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다. 업계에서는 미장·방수업종의 경우 미장은 건축물조립업으로, 방수는 도장공사업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업종에서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지만 특히 미장·방수업종과, 조적, 석공사업이 크게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비슷한 공종을 묶어 12개 정도의 업종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장기적으로는 전문과 일반건설업의 경계도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간헐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일반과 전문시공업이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시공과 건설사업관리 부문으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석영
제일경제신문 산업부 기자